다산포럼

의료계 무시한 의료개혁 성공할까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의 구체적인 대학별 배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갈등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사이의 간극이 크고 대학별 증원 배분의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를 이끌어온 주요 대학과 의료계는 자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정부의 증원 규모 결정과 진정한 소통 부재의 대학별 증원 배분에 허탈한 심정을 고백했다. 의료개혁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방 의대 중심의 증원을 환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의대 교수들이나 의료계는 정부가 국가 백년지대계를 졸속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총선을 의식하여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의료 전문직의 자존심을 도외시하고 핵심적인 연구대학들을 배제한 채 의료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2000명을 일시에 증원하고 그것도 바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이 정부와 지방 의과대학들에 있는가의 여부이다.

의료개혁을 의대 증원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증원을 압박하자 지난 1월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입학정원 증원 '적정'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0명 증원을 결정하였다. 너무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의료계는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정부는 미래의 의료수요를 예측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그리고 지방의료의 위기라는 3중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 7개 거점국립대학의 정원을 200명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내세운 것은 의미있는 것이지만 배정 원칙이 너무 일률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오랫동안의 논의로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있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문제를 총리가 언급했지만 립서비스로 끝날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을 보면 현 정원의 두 배 이상 증원된 사례가 17개 대학에 달한다. 현재에도 각 대학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에 교수 요원 1000명을 확보할 수 있는가? 부족한 인프라를 1~2년 사이에 메꿀 수 있는가? 교육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별 양극화 심화는 물론 부실 의대·의사를 양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 여부에 달려 있고 최종적인 열쇠는 정부의 비용부담 의지와 능력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 결정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넘어 사회 전체에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젊은이들의 의대 입학 꿈이 커질수록 우리의 교육생태계는 교란을 넘어 파괴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이과계열 엘리트의 대부분을 의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대 증원은 21세기 한국의 과학계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증원된 2000명은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1844명)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신입생 규모(1700여 명)보다 큰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의대 증원 방안은 순항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비록 의료개혁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에 동의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게 되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그것이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포퓰리즘적 결정이라고 인식할수록 그 결정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일부의 환영은 지방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것은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 확대된 정원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 논란만 커지게 된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 파동에서 최고의 전문직 권력과 연관된 개혁은 이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나 동반자로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 교훈의 수혜자인 윤석열 정부가 이 엄중한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이다. 대학별 증원 배정이 발표되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한탄이 쏟아졌다. 그러나 과연 그 다리가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건너가야 할 다리인가,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가 건너가야 할 다리인가. 이미 운명의 주사위는 굴러가기 시작한 듯하다.

청춘 톡톡

웹소설 도서정가제, 규제보다는 혁신을

김유주
광주대 문예창작과 3년

최근 문체부에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범위는 종이책과 전자책(이북)의 판매까지이다. 나처럼 웹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웹소설이 단행본 형태로 제작되어 나온 이북(E-book)은?

웹소설은 크게 무협·판타지 장르의 남성향 웹소설과 로맨스 장르의 여성향 웹소설로 나눌 수 있다. 남성향 웹소설 시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차 단위의 웹소설(이하 연재본)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성향 웹소설 시장은 다르다. 이전에 비해 연재본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는 전자책이 많다. 연재본은 보통 한 회차에 100원에 판매되지만, 그 웹소설을 25~30화 엮어 낸 단행본은 3200원에서 3800원까지 팔린다. 웹에서 연재되고 판매된 같은 내용의 웹소설인데 연재본이냐 단행본이냐에 따라 가격차가 난다니 아이러니하다. 이는 독자에게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불리하다. 연재본 형태의 웹소설은 회차당 100원 정도의 소액 결제 덕분에 독자들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지만, 단행본 형태의 이북은 연재본에 비해 독자들의 유입도가 떨어진다.

여기서 왜 이북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연재본을 구매해 보는 게 이득인데 왜 이북을 구매하는 거지?" 그 답은 여성향 웹소설 시장의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향 웹소설은 연재본보다 단행본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많다. 이북 형태를 선호하는 독자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여성향 웹소설 중 특정 장르의 경우 타 무료 사이트에서 완결까지 마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나온 웹소설이 유료 형태로 연재되는 웹소설보다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단행본 형태의 웹소설은 '웹소설'로 분류되어 함께 도서정가제 예외 대상이 될까, 여태 그랬듯 '전자책'에 속한 채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을까.

나는 이에 대해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는 여성향 웹소설 시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향 웹소설의 주요 소비층인 30~40대에서는 아직 이북을 더 선호하는 듯하지만 남성향 웹소설처럼 가볍고 빠른 전개를 추구하는 독자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웹소설 단행본과 일반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바꿔 출간한 도서를 구분해 따로 법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여성향 웹소설 시장을 바꾸는 것이 더 간편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단행본 형태로 제작되어 나온 수많은 웹소설을 연재본으로 바꾸어 재출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구간이 회차로 연재되는 신간보다 금액이 높은 건 여전할 텐데,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는 한) 오래된 것이 새것보다 비싼 것은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내세우는 두 번째 안은 출간된 지 일정 기한이 지난 도서들의 할인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아니기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출간 후 일정 기한이 지난 도서들의 최대 할인율을 더 높이자는 것이다. 웹소설과 전자책을 떠나 모든 도서에서 신간과 구간에 가격 차를 두게 된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단행본 형태의 웹소설도 연재본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독자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고, 장기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책들의 재고 처리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전자책은 판매보다 대여, 구독의 성격에 더 가깝다. 종이책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 소유권이 구매한 이에게로 오지만, 전자책은 '구매'하더라도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것일 뿐이다. 전자책의 소유권이 작가에게 있고,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라이선스를 전달해 주는 플랫폼의 영속성이 불명확한 이상, 독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로 다가오는 셈이다. 그럼에도 전자출판물 시장은 갈수록 커져 가고 종이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도서 외에도 영상 등의 수많은 콘텐츠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웹소설을 포함시켜 그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값싼 전자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왜 종이책을 구매하려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 고

'오월학교'에서 배우는 민주 정신

주보람
5·18기념재단 교육담당

전국의 동네서점에는 '오월서가'가 있다. 오월과 관련한 책과 홍보 자료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3D 입체 퍼즐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쉽게 배우고, 제주4·3평화재단 등 기관들과 연계해 또 다른 역사를 접할 수도 있다. 5·18 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오월학교 프로그램들이다.

5·18기념재단 오월학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미래세대와 교사, 시민, 공직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사업은 2023년부터 특화돼 더욱 다양해졌다.

오월 광주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월학교가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5·18수업을 위해 교사연수를 진행하는 이유다.

오월학교는 매년 교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사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5·18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 연수는 기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유사 민주화운동 답사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내실 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육자료와 문화콘텐츠 정보 등을 상시 제공받을 수 있다.

5·18의 전국화를 위한 전국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우리동네 오월학교 공모도 눈길을 끈다. 우리동네 오월학교는 일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대상별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강연, 워크숍, 공연, 전시.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5·18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1개의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지역과 단체별 특성에 맞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 강원, 대구, 부산, 충북, 광주·전남 등 각지에서 '우리동네 오월학교'가 펼쳐졌다.

오월학교는 학생들이 흥미롭게 5·18에 대해 알아가도록 다양한 5·18 교육 콘텐츠 및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있다. 5·18 초등교과서(2종)와 5·18 중등인정교과서(1종), 초·중·고등학교 활동지, 3D 입체퍼즐(2종) 및 직소퍼즐(1종)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지원한다. 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e-러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5·18민주화운동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한다.

전국의 동네책방 및 공공기관과 함께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오월서가는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배움을 만드는 공동체 형성의 공간이다. 시민들에게 오월의 가치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교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국 오월서가에서는 각각의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5·18 콘텐츠를 홍보하면서 제공하고 있다. 광주의 오월을 전국 59곳의 책방 '오월서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직자 대상 5·18 강의도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월학교에서는 지난해 광주시의원, 동구의회, 서구의회, 북구의회, 광산구의회 등을 대상으로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및 특강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 활동가, 청소년, 시민 등에게 맞춤형 교육 강의를 제공하고 분야별 5·18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각 구청 및 광주전남기자협회 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5·18기념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해 오월 교육포럼을 개최한다. 다양한 전문가와 교육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 5·18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오월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던 5·18'의 가치와 의미를 접해보면 좋겠다.

社說

의대교수들, 현장 이탈보다 환자생명 돌봐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어제 조선대 의대 교수와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최근 양 대학 비대위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거쳐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감행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금명간 무더기 사직서 제출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일단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당분간 진료는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25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에 나섰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환자들은 또다시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취소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의료파국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의료현장에 수혈할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경우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과 제자들의 면허정지를 걱정하는 교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 의료인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다행히 엊그제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어제도 내각에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공통분모가 환자와 국민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대화와 소통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가 지속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통 안되는 광주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시가 운영중인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온(ON)'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개통한지 5년이 지났지만 형식적 운영에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때인 2019년 3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운영해오다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도 '광주온'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민제안 건수는 2021년 797건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23년에는 239건까지 감소했다. 대다수 제안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되기 때문인데 지난 5년 동안 광주온에 등록된 시민제안 2562건 가운데 '정책 권고'로 이어진 사례는 2.6%인 69건에 불과했다. 까다로운 채택 기준이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제안 이후 30일 동안 '공감' 50표를 받고 100명 이상의 의견(토론)을 받아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광주온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허들 자체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 참여도 저조하다. 광주시는 3만3272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설문 평균 참여율은 1회당 12%에 불과하다. 시민정책참여단의 10~20대 비중이 11%에 그쳐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소통 플랫폼이 이런 저런 이유로 외면받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광주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시민제안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설문조사 참여시 마일리지 제공 등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 하루빨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행정 제도가 의도는 좋은데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행정과 정치는 의도만 좋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 성과로 보여줘야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無等鼓

파란색 1

'1등급 한우 간판도 1번, 나도 1번', '젓가락도 1번, 1번 XXX', '전봇대도 1번', '가로등도 1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한 후보는 일상의 길고 반듯하게 생긴 물건을 찾아다니며 번호 1번을 홍보하는 쇼츠(Shorts·짧은 동영상)를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다.

겸연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만든 영상을 보면서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기시감이 떠올랐다. MBC가 지난 2월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숫자 '1'을 커다란 파란색 그래픽으로 내보낸 뉴스를 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지한 반응을 다룬 보도였다.

한 위원장은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며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상캐스터가 2월 초미세먼지 농도 1㎍/㎥이 관측되는 건 드문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상징색과 기호를 홍보했다는 주장을 폈다. 일기예보가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법정 제재를 예고했다. 야권과 온라인 등에서도 기상천외한 반응이 잇따랐다. "KBS 1TV 1도 파란색이다, 빨간색으로 바꿔라", "사진 찍을때 손가락 2개를 펴 '브이'를 그리면 모두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선거 기간 내 (일상의) 빨간색, 파란색 모두 금지해라'는 글도 올라왔다. 총선을 앞둔 '색깔 신경전', '숫자 신경전' 아닌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반면,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가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으로 꼽은 주제이기도 하다. 극복 방안도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견해와는 상반된 정보를 찾으려고 애써보라는 것이다. 처방이 내려졌는데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정치권의 확증편향이 가장 심한것 같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